

총학생회 선거 무산 -

'학생운동에 대한 심판' 인가?

올해 고대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이 50퍼센트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나 투표한 48퍼센트의 적극적 의사를 존중해 연장투표를 했더라면 선거무산은 피할 수 있었다.

유병문 중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중선관위원 다수는 '투표하지 않은 52퍼센트도 중요하다', '투표율 미달은 학생운동에 대한 심판'이라며 선거 무산 결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선거 무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투표율은 전체 학생운동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여지가 많다. 학생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받을 수도 있고, 외면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불균등

올해 고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각 단과대 별로 불균등했다.

단과대 학생회가 잘 운영되고 복지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낸 공과대의 경우, 전년도 총학투표율에 비해 올해 투표율이 10퍼센트가량 올랐다.

간부장학금까지 거부하면서 학교와 일관되게 투쟁해 교육투쟁 요구안을 거의 100퍼센트 실행에 옮긴 사범대의 투표율은 거의 60퍼센트에 육박했다.

단과대 통합합문제로 학생회가 앞장서서 항의를 조직했던 정보통신대도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작년엔 최종투표율이 40퍼센트도 넘지 못한 문대는 올해 투표율이 50퍼센트에 육박했다.

반면 올해 학생회 운영이 잘 되지 않은 법대나, 학생회장이 임기도 마치지



투표한 48% 학생들의 의사는 버려지는가

않고 사라진 이과대 등은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 3일째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법대는 작년에 비해 무려 12퍼센트나 투표율이 감소했고 이과대는 무려 23퍼센트나 감소했다. 경영대 투표율도 10퍼센트가량 떨어졌다.

사실상 이 세 단과대의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전체 투표율 미달의 핵심 원인이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법대와 이과대는 바로 '강한나라 강한고대' 총학생회와 같은 경향이다.

강한나라 강한고대 경향(올해 'FEEL'

경향은 자신들이 지도한 단과대에서 드러난 학우들의 불신을 고대 전체 단과대와 고대 학생 운동 전체의 탓으로 돌렸다. 전 총학생회장이던 유병문 선관위원장은 "선본 모두가 학생들의 심판을 견뎌야 한다"며 선거무산을 일관되게 밀어부쳤다.

침소봉대

사실 '강한나라 강한고대' 학생회 위기는 예정된 것이었다. 올해 총학생회는 이

름과는 달리 전혀 '강하' 지 않았다. 1년 동안 이견희 시위에 대한 학교와 우파 학생들의 공격, 학교측의 일방적인 분리납부 통보,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 등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후퇴해 왔다.

반면 올해 1천 명 이상의 단과대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사범대의 경우, 사범대 학생회가 대중 행동 건설에 단호하게 앞장서 왔기 때문에 학우들의 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학생총회에 사범대 학생 30퍼센트가 참가하는 등 대중 행동 건설의 성과로 사범대는 지리교육과 실험실습비 폐지를 통한 등록금 50만원 인하, 교생실습비 폐지, 낡은 책걸상 전면교체, 사범대 분관 화장실 리모델링 약속, 사물함 추가 설치, 자치공간 선풍기 지급 등의 성과를 따낼 수 있었다.

학교측이 이견희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범대 학생회장을 징계하려 했을 때도, 사범대 학생회는 가장 앞장서서 이견희 시위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징계반대 서명을 받았다.

모든 단과대 학생회의 위기도 아니고, 학생 운동 좌파가 지도하는 학생회 중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한 곳도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심판' 운운하며 선거를 무산시킨 논리는 굳세하기 짝이 없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무산 결정, 'FEEL' 경향의 전학대회 대의원 집단 퇴장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연장투표를 반대하는 것이, 혹여 'FEEL' 학생회가 당선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입소문이 그럴 듯하게 들릴 법도 하다.

전학대회 집단 퇴장이야말로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

총학생회 선거 연장투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전학대회가 대의원 정원 총 65명 중 43명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열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법대 학생회장 곽동현, 정대 학생회장 박찬수, 문과대 부학생회장 신지수, 경영대 부학생회장 이학영 등 'FEEL' 과 '연금술사' 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집단퇴장하면서 전학대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에 전학대회 개최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연장투표도, 신임중운위도 인정할 수 없었던 이들은 총학생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학대회만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전학대회에서는 '의장(총학생회장)이 없는 전학대회는 회칙 상 전학대회가 아니'라며 전학대회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말 자체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결정할 사항을 뒤집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학대회는 학우들이 뽑

은 43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였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라는 이름이 충분히 어울리는 자리였다. 총학생회장이 없어서 대책을 세우려고 모인 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이 없으니 아무 것도 못한다는 논리는 총학생회장이 뽑히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총학생회 1인만 중요하고, 43명의 선출된 학생회장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 주장이 표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이들은 또 다른 근거-연장투표 여부는 회칙개정안건이므로 대의

원 2/3이상이 모여야만 한다-를 들어 회의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 주장 역시 표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연장투표 여부 표결을 눈앞에 두자 정대 학생회장을 필두로 집단 퇴장이 시작됐다. 사실상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을 한 것이다.

퇴장한 대의원들은 '회칙은 학생들 간의 약속이므로 분명히 지켜져야 하며 이것을 어길 경우 학생들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학생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전학대회 집단퇴장이다. 55%의 학우들은 지금 어떻게든 학생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고대신문 12월5일자), 결국 이런 의사가 대표자들의 표결도 거치지 못한 채 무시됐고 오히려 학생회에 관심 없는 소수 학생들의 의견대로 되어버린 셈이다.

'KU-INTO'와 '허브형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

‘연금술사’ 선본은 ‘KU-INTO’와 사이버 의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학생회, 이제 는 논쟁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논쟁의 중심에 서지는 얘기는 듣던 중반가운 얘기다. 바로 이견희 저지 시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우리는 연금술사 선본 경향의 학생회에게 논쟁과 투쟁의 중심에 설 것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쟁의 중심에 서졌다면 ‘연금술사’는 2005년 학생 운동이 ‘선언’과 ‘강변’으로만 가득했다면서, 마치 학생회가 분명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학생회의 민주주의나 대중 운동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리고 ‘KU-INTO’를 통해 설문 조사 결과를 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누군가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자주적 활동을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회가 분명한 정치적 주장을 통해 학생들 자신의 능동성을 고양시키는 것이 설문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머무는 것보다 더 민주적이다.

게다가 만일 설문 조사 결과가 학생회의 진보적 주장과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논쟁하지 않고 침묵할 것인가?

‘연금술사’가 예로 든 이견희 시위와 정대 K교수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학생회가 입장을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이 필요했다. 사회 진보를 위한 활동이 항상 다수 학우들로부터 지지만 받기만 어렵다. 이럴 때는 학생회가 왜 그런 활동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학우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FEEL’ 선본은 슬립형 총학생회, 신개념 허브형 총학생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총학생회는 부문의 연합 이외에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총학생회는 다양한 부문들을 연합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행동으로 조직할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등록금 투쟁

협상보다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고대 공감대’는 등록금 투쟁에서 ‘협상’을 강조했다. “본관점거는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며 “학교와의 협상으로 등록금 문제를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와 협상 테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등록금 책정 위원회를 비롯해 학교와 학생 대표 사이의 수많은 협상 테이블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항의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미 합의한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 테이블은 언제나 학생들의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 무실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학생들의 광범한 불만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것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 대학 당국은 비로소 압력을 느끼고 학생들에게 양보하려 한다. 따라서 단순한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우들의 자주적 행동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대정부투쟁이 대학 당국과의 투쟁을 회피하는 면피용으로 전략해야 하나?

‘연금술사’와 ‘FEEL’은 교육 투쟁에서 대정부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역시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재정 확충과, 더 나아가 무상교육을 위한 사회적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정부투쟁 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는 한 주체인 대학 당국과의 투쟁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런데 ‘연금술사’와 ‘FEEL’은 대정부투쟁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대학 당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연금술사’는 “학교에 돈이 없다”는 어윤대 총장의 말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앞 대자보)

‘FEEL’ 부후보인 이행섭은 공청회에서 대학의 독자적 수익구조가 없고 돈이 부족하다는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몇 달 전에 고려대에 1400억 원의 이월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게다가 고대 재단은 학교 전체 운영비 중 턱없이 낮은 재단전입금 비율(1.7 퍼센트)을 기록하고 있다.

두 선본의 입장은 의도치 않게 돈 많은 고려대 당국이 등록금 인상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면서 자신은 면죄부를 받는 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진보적 총학생회라면 대학 내의 투쟁을 전국적 차원의 대정부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본관 점거 농성은 종종 학사 행정에 차질을 빚게 만들기 때문에 대학 당국에 페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총학생회라면 이러한 대중 행동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총학생회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 총학생회를 지향하는 ‘연금술사’, ‘FEEL’, ‘고대Timing’ 선본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중 행동을 건설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마치 선거 공약을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처럼 취급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비상학생총회에 참가한 고려대 학생들 - 2002년부터 고려대는 매년 비상학생총회가 성사됐다

'5월 선거'가 교육 투쟁의 만병통치약인가?

‘연금술사’ 선본은 이번 선거에서 모든 신문과 대자보에 걸쳐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5월 선거’를 강조했다.

현재 대학 예산과 정부의 교육 예산안 작성이 총학 선거 기간 무렵이므로, 총학 선거에서 당선한 선본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미리부터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 시기를 2학기에서 1학기로 앞당긴다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술사’의 5월 선거 제안의 맥락에는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연금술사’는 2005년 교육 투쟁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모든 교육 투쟁이 패배해 왔다고 진단하며 그 원인이 모두 선거 시기 문제에 때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까지 고려대의 모든 교육 투쟁이 패배해왔는가?

당장 2005년도 교육투쟁에서 면학장학금이 10억 확충되고 심리학과·지리교육과·통계학과 등록금이 50만원 인하된 것은 큰 성과였다. 2002년에도 김정배 총장을 퇴출시키고 다음해에 등록금 차등 인상을 폐지한 바 있다. 지난 3년 연속 비상 총회가 성사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교육투쟁의 성공 여부가 반드시 선거 시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11월에 선거를 한다고 해도 교육 투쟁이 승리로 끝난 사례는 많다. 조선대는 작년 교육투쟁의 성과로 올 해 등록금을 완전히 동결시켰다. 부산대와 중앙대는 학생들의 강력한 항의 행동 때문에 학교측이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핵심은 선거 시기가 아니라 얼마나 학생들의 불만을 광범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더 크게 달려있다. 선거 시기가 투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 요인은 아니다. 선거 시기를 핵심으로 주장한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회 활동에서 정치를 분리해야 하는가?

‘고대공감대’는 선거 자료집과 신문에서 ‘정치활동분담금 삭체’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자신들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에도 결코 소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고대 timing’도 지금의 ‘운동권’을 ‘낡은 것들의 대명사’, ‘외부 정치단체의 영향’을 받은 ‘매니아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학생회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도 정치다. 문제는 어떤 정치냐다.

두 선본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학내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에서조차도 진보적 정치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전쟁비용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경쟁이 더 격화되고 학문 간 줄세우기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재편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의 묵인 하에 사립대학들이 답답을 통해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정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정치가 필요하다.

학생회의 정치 활동이 과연 학생

들을 학생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2002년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 항의 시위나 반전 운동에서 학생들의 참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2003년 서울대 총학 생회가 파병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휴업을 성사하고 국회 앞 시위에 2000명의 학우들을 모은 것도 학생회가 정치활동을 통해 학우들의 참여를 끌어낸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학생회 활동과 정치활동의 분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생운동이 정치쟁점과 학내 쟁점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명명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학생회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넘쳐나는 장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거시행세칙은 각 선본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선거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선거 자료집 제출 시기와 같이 선거 진행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약속 정도는 선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고려대의 현 선거세칙과 그 운용은 지나치게 제재 위주여서 선본의 활동을 제약하는 성격이 훨씬 강하다.

예컨대 인터넷 선거운동을 선본 홈페이지에만 한정해 놓아, 고려대 자유게시판에 선본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도 선본 이름으로 댓글조차 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홍보용으로 만든 팸말을 실수로 땅에 내려놓기만 하면 바로 ‘경고’다. 대자보 크기가 타 선본보다 약간 크기만 해도 바로 징계를 받을 정도였다. 이를 악용해 ‘연금술사’ 선본은 다른 선본의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고발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 바빴다.

선거세칙이 선거운동을 고정된 틀로 한정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선본들 간의 풍부한 논쟁과 토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창의적인 선거운동방식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군소후보가 소신껏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선거 출마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사소한 규칙 위반은 ‘시정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완화하고, 규제위주가 아닌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세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본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문제다. 고대 총학 선거는 말로만 공영제일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올해 선거에서 각 선본은 기탁금과 선거 자료집 비용으로 130만원을 선관위에 지불해야 했다. 학생회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군소후보가 소신껏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선거 출마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인권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는 ‘미래고대’

이번 총학선거에서 ‘미래고대’는 “비운동권” 강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비운동권”이라는 말이 품기는 뉘앙스와 달리, 미래고대는 매우 분명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래고대’는 자신의 리플릿을 통해 이견희 시위를 비난하는 글과 만화를 실었다. 공청회에서 “삼성의 노동 탄압 행위, 변칙 증여, 불법 투기, X-file 등 수많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견희 회장은 처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

래고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시위의 정당성과 별개로 시위가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2000년 김영삼 방문 반대 시위는 많은 학우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특별한 합의 과정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와 학문에 맡겨야 한다.”는 궁색한 주장을 폈다.

‘미래고대’는 “히틀러나 김정일조차 학문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또 ‘미래고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미래고대’는 탈북자들처럼 한국에서 인간사냥 당하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고, 대표적인 인권 탄압 법안인 국가보안법은 “필요약”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인권문제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미래고대’는 인권에 진정한 관심이 없고, 사회진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본인이

2005년 고려대 학생 운동 평가와 과제



올 한 해 고려대 학생 운동에 가장 큰 여파를 남긴 사건은 무엇보다 지난 5월 이견희 박사 학위 수여 항의 시위와 그 이후의 논란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이견희 저지 시위는 고려대를 정치적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한국 사회 제1의 권력자와의 투쟁은 전 사회적 차원의 투쟁을 동반했고, 학내에 존재했던 다른 모든 쟁점을 압도했다.

그 날 시위는 분명히 고려대 학생 운동의 장점을 보여주었다. 삼성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을 고려대 학생들이 앞장서서 폭로했다.

그러나 그 날 시위 이후의 사회적 논란을 고려대 학생 운동 세력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시위를 주도적으로 조직했던 학생 운동 세력들은 기성 보수 언론들과 청와대와 대학 당국까지 나서서 비난하자, 급세 위축됐다.

그 날 시위는 고려대 내의 여론을 양극화했다. 시위를 방어하는 학생들과

비난하는 학생들로 갈렸다. 총학생회 탄핵안을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특정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연출됐다.

그러나 '강한나라 강한고대' 총학생회나 문과대·정경대·경영대 'Q' 학생회는 그 시위를 함께 조직해놓고도, 정작 민감하고 첨예한 논쟁점이 불거지자 시위를 방어하기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총학생회는 보수언론과 우파 학생들의 공격에 밀려 시위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돌출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후퇴했었다. 그리고 이견희 시위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동원한 정경대·문과대·경영대 학생회도 시위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기 보다는 사태를 봉합하려고 쪼뻛쪼뻛했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하며 시종일관 수세적이었다. 심지어 경영대 학생회장은 평화고대가 올린 총학탄핵안 상정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날 시위 이후 '다함께' 고대모임은 그 날 시위를 시종일관 방어했던 유일한 좌파가 됐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올해 고려대 학생 운동 좌파 중 일부가 위기를 겪게 된 배경을 찾는다. 바로 올해 정작 중요하고 뜨거운 문제에 대해 대다수 학생 운동 세력들은 원칙 없이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올해 총학생회는 한 해 동안 큰 위기를 겪었다. 이는 올해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이들의 기반이었던 법대와 이과대에서 매우 저조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올해 총학생회를 운영한 것 때문에 특히나 이견희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못매를 많이 맞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들은 그 시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할만한 자신감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연금술사' 선본과 연관된 연대회의는 대체로 상반된 견해 양쪽에서

동요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자주 보였다. 연대회의는 이견희 시위뿐만 아니라, 올해 초 정경대 K교수 사건 때도 결정적인 시기에 단호하게 교수성폭력 문제를 비판하지 못해, 정경대의 많은 활동가들이 사기저하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 연장투표 논란에서도 그때그때 수차례 입장을 바꾸곤 했다.

이견희 저지 시위는 이들 다른 학생 운동 좌파들에게 자신감 결여와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여름에 계절학기 등록금이 갑자기 인상돼 학생들의 불만이 팽배했지만 총학생회는 적극적으로 투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어물쩍 넘어가버렸고, 학교가 학생회 탄압의 일환으로 학생회비 분리납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때도 자신감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는 올해 선거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FEEL' 선본과 '연금술사' 선본의 정책에서는 선거 과정 동안 대학 당국과 투쟁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거의 잃을 수가 없었다.

이들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위기를 전제 학생회에 대한 불신으로 침소봉대한 후, 선거 무산을 강행했다. 현 총학생회는 학생회비 분리납부 찬/반 총투표도 어물쩍 넘겨 버렸다.

자신들의 위기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과장해 선거를 무산시킨 이들의 행동은 투표에 참가한 능동적인 학생들의 환멸을 더욱 키웠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정부와 대학 당국에 맞서 학우들의 자주적 행동을 고무한다면 함께 그 운동을 함께 건설할 태세가 돼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대의에 충실하지 못하고 회피와 기회주의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이익에 기초해 독립적으로 운동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고려대 학생 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생회비 분리납부 총투표 파행을 규탄한다

올해 이견희 저지 시위 직후, 학교 측의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진 갑작스런 학생회비 분리납부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 때문에 올해 2학기에 열린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기간에 학생회비 분리납부 찬반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선본들 중에, '고대timing', 'FEEL', '미래고대'는 분리납부 반대, '액트나우'와 '고대공감대'는 분리납부 찬성을 밝혔다. '연금술사'는 애초에는 반대했다가 공청회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뛰어넘어 민주적 절차

가 필요하며 분명한 대답을 회피했다. 그 동안 '연금술사' 후보들은 전학대회와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일괄납부가 옳다'고 주장해 왔는데 공청회때는 아무 근거 없이 입장을 바꿔 버렸다.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학생회비 납부 방식을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에는 분명 항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일괄납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지지를 통한 학생회비 납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당연히 납부율은 학생회에 대한 지지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파행

물론, 학생회비 납부 방식 자체도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총학선거투표와 함께 실시된 학생회비 분리납부 찬반 총투표는 학생들의 의사를 묻는 중요한 투표였다.

그러나 일괄납부를 지지하던 올해 총

학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분리납부 총투표를 성의 있게 조직하지 않았다. 투표 첫째 날에는 투표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아예 총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일부 투표소에만 투표함이 차려졌다.

결국 총투표는 일찍 접어버렸고, 투표율과 투표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측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통해 학생회비 납부 방식을 정할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다.

유병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민주주의' 운운하며 선거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정작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총투표 조차 제대로 조직하지 않아, 학우들의 민주적 결정 권리를 박탈한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장 자신이다.